

지자체 대형공사 지역 중소기업 40%이상 참여시 유리

행자부 관련 규정 개정

자치단체의 대형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40% 이상 참여시켜야 유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2일 공포한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올해 1월 폐지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해 마련됐다. 지자체 대형공사 낙찰기준은 국가계약과 달리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하

도급 비율 82%를 넘겨야 하도급 비율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3년 이내 건설공사 품질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 우수 시공업체를 우대한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신용 요건을 제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공사 수주 고용인원이 많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우수한 지역업체에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설물 완성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형공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

제2경춘국도 추진 '속도'

용역조사 국비 확보...춘천시-가평군 협약 체결

속보=서울과 춘천을 잇는 새로운 국도인 제2경춘국도 신설 추진(본지 2015년 6월10일자 1면·12월4일자 10면)이 속도를 낸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인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확장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춘천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같은달 춘천시는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연구용역에는 향후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경춘국도, 제2경춘국도의 교통량 분석과 제2경춘국도 후보 노선 3개 등이 담겼다.

춘천시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제2경춘국도 신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 신설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평군과 이달 중 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춘천시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열린 '강원권 SOC사업을 위한 지자체 지역협력관 간담회'에서 제2경춘국도 신설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춘천시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 금남IC가 종점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춘천까지 연장하는 '춘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동서고속철에서 보듯 가장 중요한 건 국토부가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느냐"며 "정치권, 인근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이뤄 예타 통과는 물론 조기착공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양구군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 760억

한반도섬 경관 조성 등 신규 64건 포함 총 100건

양구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 760억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일 양구군에 따르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신규사업 64건, 계속사업 36건 등 모두 100건이며 사업비는 신규사업이 330억 원, 계

속사업이 430억 원 등 모두 760억 원 규모다.

신규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한반도섬 경관 조성사업과 수입천 평화누리길 사업(총사업비 25억 가운데 국비 2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양구군은 국비 확보 사업을 △국책

사업(철도, 고속도로, 항만, 국도 등 국가 직접시행 사업) △국고보조사업(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郡 가치제고 가능 사업) △지특회계사업(지역사회기반시설, 지역 활성화 등 지역경쟁력 제고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비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중에 부서별 연찬회와 간담회를 통해 국비확보 사업의 반영 논거를 적극 개발하고 국비 확보 발굴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지역(마을)단위 특성화 사업,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관광 개발사업, 지역자원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신규사업을 5건 이상 발굴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구/진종인 whddls25@kado.net

‘중평제’ 낙찰자 결정기준 오늘 공포

덤핑낙찰 방지... 중견·중소사 참여기회 확대 기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게 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중평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정안)’이 확정·발표됐다.

예규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77%의 낙찰률을 보장키로 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덤핑낙찰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시장 적용 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예규를 확정,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지자체별 설명 및 조달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1일로 예정했다.

예규는 지금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된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초부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예규 주요 내용에는 지난해 11월 ‘중

적정 하도급비율 보장하고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 완화
“시범사업 없어 혼선” 우려도

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발표한 대로 적격성심사와 종합평가의 2단계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공실적(70점)과 신용평가(30점)를 평가항목으로 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하는 적격성심사를 거쳐 가격과 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 적정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동점자가 나올 때는 낮은 가격입찰자를 우선 선정하고, 가격이 같을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여기에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 및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방안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1월 이후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를 검토해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업체가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지방계약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급의 직불을 유도하는 방안이 더해졌다.

특히 대기업에 유리하다고 지적된 기술개발투자비용과 신기술 개발 활용 실적 등의 평가 점수를 완화해 중견·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를 평가해 신인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술능력 평가에서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 부분(기술개발투자, 신기술 활용실적)을 조정했고, 건설인력고용 부분을 새롭게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우수업체 선정 그리고 적정공사비 반영 등으로 안전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중평제 시행으로 덤핑낙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범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업 월평균 임금, 전년보다 4% 늘어

지난해 12월 275만7000원
전기·가스·수도사업분야
872만4000원으로 ‘최고’

타났다.

건설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시간으로 전년 동월(155.5시간) 대비 1.6%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3시간으로 전년 동월(180.1시간)보다 0.4%(0.8시간) 떨어졌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200.1시간), 제조업(192.8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업종은 건설업(153.0시간), 교육서비스업(155.0시간) 순이었다.

올해 1월 기준 건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1만5000명) 늘어난 89만명으로 추산됐다. 상용 근로자 수는 3.5%(64만8000명) 늘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1.5%(22만6000명) 줄었다.

임직자와 이직자는 각각 9만6071명, 15만8888명으로 조사됐다. 임직자 수는 작년 1월보다 6521명(-6.4%) 줄었고, 이직자 수는 3788명(2.6%) 늘었다.

김부미기자 boomi@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7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12월 기준 건설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5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265만2000원)보다 4%(24만10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8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64만6000원)보다 6.6%(24만1000원) 늘었다.

산업별로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72만4000원) △금융 및 보험업(631만9000원) 순이었으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8만9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24만2000원) 등으로 나